

규제완화, 외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및 정주환경개선

- 개발기간(실시계획승인절차) 획기적 단축 (최장12개월 ⇒ 5개월) -
-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(법인세,소득세감면 5년 ⇒ 7년) -
- 세계유수대학 5개, 연구기관 10개 및 외국병원 3개 유치 (2012년까지)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이윤호)는 5.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관계부처*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'경제자유구역활성화방안' 을 보고함

* 기획재정부, 교육과학기술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가족부, 국토해양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 추진단

□ 동 회의에서 이윤호 장관은 심화된 글로벌경쟁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, 전국토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

-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규제완화 및 경영환경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험장(test-bed)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음

- 즉, 경제자유구역이 "한국 속 또 하나의 세계"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의 확대를 통한 진정한 特區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

□ 이윤호 장관은 상기사항의 실천을 위한 "경제자유구역 활성화" 방안을 발표함

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

□ 외투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확대

(법인세·소득세 "5년" 감면 ⇒ "7년" 감면으로 확대)

○ 그간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완비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맞이하여야 할 경제자유구역이 오히려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지역(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)보다도 조세 감면 혜택이 적은 불균형한 현상이 발생하여옴

- 이에따라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외국인투자유치지역이 되지 못하는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

○ 이러한 역전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·소득

세 감면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*

* (3년간 100%, 그후 2년간 50%) ⇒ (5년간 100%, 그후 2년간 50%)

- 이에따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별도로 중복 지정받는 절차* 없이도 7년형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 편의가 대폭 제고됨

*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·도지사가 지정

- 동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는, “수요자 중심”의 경제자유구역 구현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

〈 경제자유구역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감면 혜택 비교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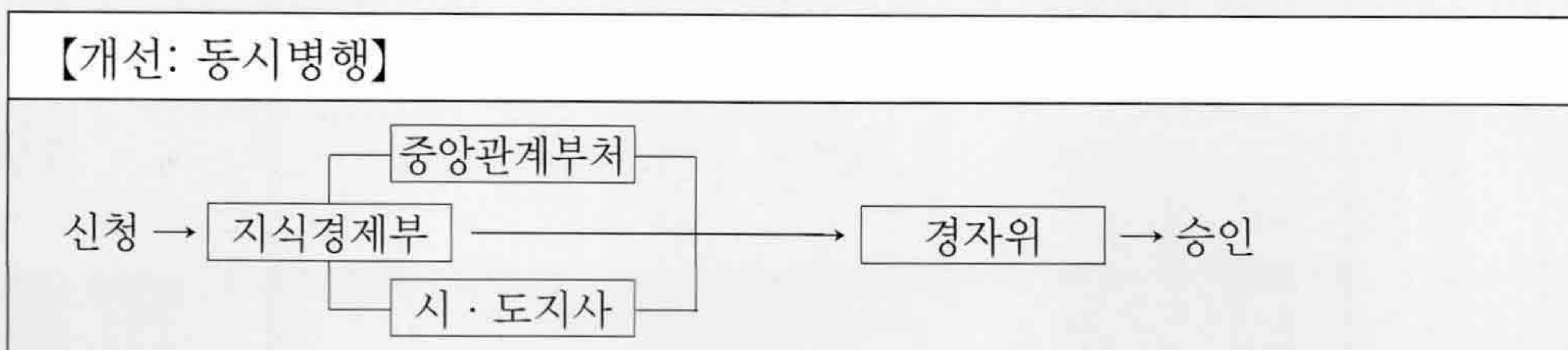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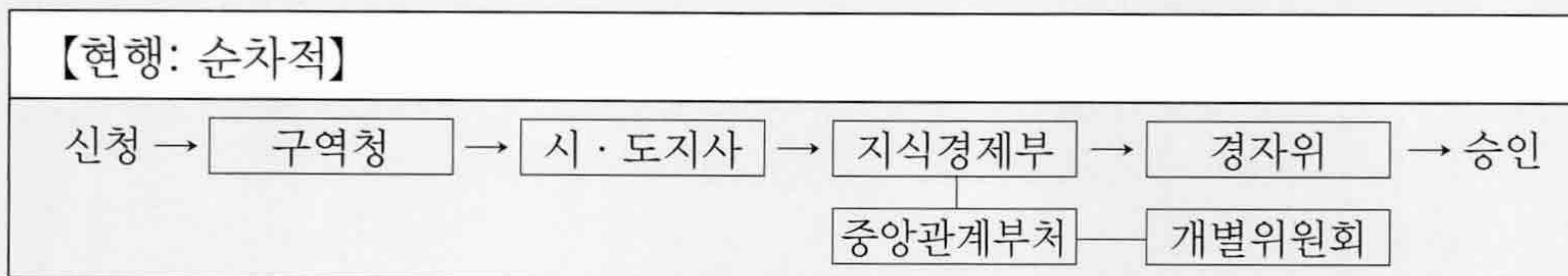
| 구 분 | 경제자유구역 |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|
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
| 법인세·소득세 감면기간 | (현행) 3년간 100%, 2년간 50% ↓ (개선) 5년간 100%, 2년간 50% | 5년간 100%, 2년간 50% |

*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의 경우 최장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

□ 개발사업의 가속화

(사업승인기간 대폭단축 : 최장12개월 ⇒ 3~5개월)

- 광양만권 화양지구의 경우처럼 현행의 순차적 협의절차를 따를경우 최장 12개월이 소요되던 사업승인절차를 “동시 병행적 협의절차”로 전환하여 동 절차소요기간이 3~5개월로 축소될 예정





* 화양지구의 경우 2005년 8월 신청한 실시계획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데 8개월이 소요되었으며, 동 승인 역시 산지전용 협의를 받는다는 조건부로 승인되어 2006.9월이 되어서야 실시설계 착수가 가능하였음

□ 산업입지 확대 및 개발가속화

(1년임대료가 조성원가 1%수준인 외투기업전용 장기산단조성)

-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의 지가는 경쟁국에 비해 2~6배수준으로 높은 지가가 외국인 투자유치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

〈 산업단지 분양가 국제비교 〉

(단위: 천원/m²)

| 부산 명지녹산 | 부산 과학 | 중국 푸둥 | 중국 상해 | 중국 심천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186 | 179 | 106 | 31 | 30 |

-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지조성원가의 1~5%수준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장기산단을 조성할 것임

- 이에따라 연간 임대료가 m²당 1,500원선에서 공급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어 외투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

*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며, 3개단지에서의 시범운영후 경제자유구역내 전체 산업용지의 10%까지 확대할 계획

〈 임대산단 시범공급 계획 〉

(광양 해룡산단) 66,000m² (순천시, '08.10월 실시계획승인)
 (부산·진해 미음지구) 66,000m² (부산도시개발공사, '08.2월 실시계획 승인)
 (인천 청라지구) 66,000m² (토공, '08.12월 실시계획 승인)

(송도국제도시 11공구 매립을 위해 매립기본계획 변경추진)

- 송도 11공구(10.24km²)가 국토해양부의 매립기본계획에 미 반영됨에 따라 매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송도국제도시의 기형적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

- 개발용지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인도 하락 등 외자유치활동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음

* 인천의 경우 '03.8월 매립을 전제로 개발계획을 확정하였으나, 송도지구 11공구만 매립기본계획에 미반영 되게 됨에 따라,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있었으나, 금번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음

○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를 위한 토지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도 11공구 매립을 위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함

□ 외국인 친화적 경영·정주여건 조성
(외국인학교 내국인입학 규제합리화)

○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의 경우, 내국인 입학생 비율이 2%로 제한되어 있어, 외국인 학교설립 초기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

○ 2%로 제한된 내국인 학생비율을 없애고 해외거주요건(현행5년)만 충족할 경우에는 내국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여 외국인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제고토록 함

(외국대학 및 연구소 유치)

○ 외국 대학, 연구소, 연구기관 유치에 설립비 및 초기운영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2012년까지 5개외국대학(원), 10개 해외첨단연구소 유치할 계획임

- 광양지역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(금년 3월개교)이 개교한 바 있으며, 인천청*을 중심으로 세계 우수 연구기관 및 대학과 MOU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유치가 진행중

* 생명공학분야 세계1위 SALK 연구소 및 바텔연구소, IBM 연구소와 '07.11월 MOU 체결

* 뉴욕주립대('07.10) 및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('07.10)와 MOU 체결

(외국의료기관 유치)

○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외국의료병원설립을 허용하고는 있으나, 병원설립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("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")은 국회 계류중

○ 동 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한 외국의료기관유치 환경 조성